

↑ 코스피 2569.71 (+8.02)	↑ 코스닥 768.98 (+6.85)
↑ 금리 (미국 9년) 2.824 (+0.044)	↑ 환율 (원-달러) 1349.30 (+30.00)

지능화 되는 딥페이크 기술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취약

보험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신종사기 범죤 노출 가능성 ↑

AI 딥페이크 탐지기술 도입 등
새 위험 대비 선제 대응 필요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금융 손실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딥페이크 보험사기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사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의미)가 정치적 조작, 명예훼손, 성적 콘텐츠 생성, 사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제정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또한 딥페이크는 최근 금융 사기 등

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 발전에 따라 관련 사기로 금융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딜로이트(Deloitte)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사기로 인한 금융 손실은 지난 2023년 123억달러(약 16조 2360억원)에서 오는 2027년 400억달러(약 52조 8000억원)로 급증해 연평균 32%의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경우 딥페이크 관련 보험사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원이 발표한 '미국 딥페이크 관련 법안 동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보험 청구의 70%가 비대면 자동처리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딥페이크 보험사기 노출 가능성도 올라가고 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험산업의 대응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온다. 보험사가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도입하는 등 딥페이크 악용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유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딥페이크 관련 법적 제재 강화로 기존에 묵

인되었던 딥페이크 사기 및 명예훼손 사건들이 부각될 수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험산업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해외 보험사의 경우 허위 청구, 보험사기 식별을 위한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문서, 영상, 음성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이나 합성된 흔적을 감지하고 허위 청구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실제로 알리안츠(Allianz)는 머신러닝 도구 '인코그니토(Incognito)'를 개발해 허위 데이터를 감지하고 사기성이 있는 보험 청구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알리안츠는 해당 시스템으로 170만파운드(약 30억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보험사들은 보험 청구의 디지털화에 따른 AI 및 자동화 시스템 이용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노출되고 있다"며 "일부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허위 청구, 보험사기 식별을 위한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6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에 배추가 판매되고 있다. 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배추, 무, 상추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며 채소류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11.5% 상승했다. 배추가 53.6%, 무가 41.6%, 상추가 31.5%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뉴시스

농산물 이어 생필품까지 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

생필품 62% 작년 대비 가격 상승
수산물 14.2%, 채소 11.1% 올라
간편식·가공식품 물가도 오름세

올 여름 긴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일반 생필품 가격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12개 품목 297개 생필품 중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가격이 올라간 제품은 185개(62.3%)에 달했다. 95개는 가격이 낮아졌고 17개는 변동이 없었다.

전체 상품의 평균 상승률은 2.5%이지만 오른 상품의 평균 상승률은 9.6%에 이른다.

소비자원 생필품가격보고서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백화점·편의점 등 전국 500여개 유통 매장에서 할인 프로모션을 적용한 후의 최종 판매가격을 토대로 작성된다.

품목별로 보면 수산물(14.2%)과 채소류(11.1%)가 10% 선을 넘는 평균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했다.

생물 고등어(300~500g)가 1년 새 71.8% 비싸져 조사 대상 상품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고, 배추(1.5~3kg)가 71.4%로 뒤를 이었다.

수산물과 채소류 이외 품목을 보면 조미김을 비롯한 수산물가공품 가격이 평균 9.7% 올랐고 양념·소스류 5.7%, 축산물가공품 5.0%, 차·음료·주류 3.7%, 가사용품 3.2% 등의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간편식과 가공식품 물가도 상승했다. 김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다. 이마트24는 지난달 30일부터 삼각김밥 제품 12종과 일반 김밥 1종의 가격을 최대 20% 올렸다. 원재료인 김 단가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코카콜라의 미닛오렌지·포도·알로에(180ml) 등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씩 올랐다. CJ제일제당의 컵반 미역국밥·황태국밥·사골곰탕국밥 등은 4200원에서 4800원으로 14.3% 인상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가격인상은 원가가 상승한 결과"라며 "제조사에서 공급가를 올리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소매가도 올라간다. 게다가 중동 정세 악화 등에 따른 식품, 생필품 가격 인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의대생, 내년 복귀조건으로 '휴학' 허용

의대 학사 정상화 위한 비상대책
동맹휴학 아닌 '휴학' 명확히 해야
교육과정도 6년→5년 단축 검토



들의 기존 제출 휴학원에 대해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임을 명확히 확인한 뒤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아울러 ▲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귀 시점 명기 등의 절차도 모두 거쳐야 한다.

이 부총리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해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 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휴학 승

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 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의대생 대규모 휴학에 따라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명과, 증원된 신입생까지 총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대는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운영 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라며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4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lhj@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동훈 "야권 단일화쇼... 정쟁 선거 말라" /사진 뉴시스
▲ 중앙선관위, 10·16 재보선 투표소 2404곳 확정... 선거인 864만5180명

▲ 민주-조국혁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합의... 6일 오후 발표할 듯
▲ 윤 "남한 겨냥 핵개발 아닌란 北 주장 거짓...관심 끌기용 핵실험 가능성"



▲ 민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상설특검·국정조사도" /사진 뉴시스
▲ 김정은-시진핑, 수교 75주년 축전 교환... "새시대 맞게 공고발전"